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바꾸는 산업·공급망 질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본질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June 2026



들어가며

2025년, 글로벌 통상 질서를 움직인 키워드는 '관세'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압박을 가했다. 한국 역시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6년, 게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관세는 더 이상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환됐다.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제시된 대규모 대미 투자는 사실상 이행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상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는 이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대미 투자가 논의의 대상을 넘어 실행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만큼 기업의 준비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미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 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구조가 다르다.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및 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는 공급망 참여와 운영 역할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며, 기업은 이 구조 속에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참여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명확하다.

정부가 설계한 대미 투자 구조 속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공급망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한다. 대미 투자에서 제시된 전략 산업별로 투자 구조와 정책 환경을 짚고, 그 안에서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며 공급망 내 위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대미 투자는 일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다.

동일한 구조 하에서도 기업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참여의 의미와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의 대응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를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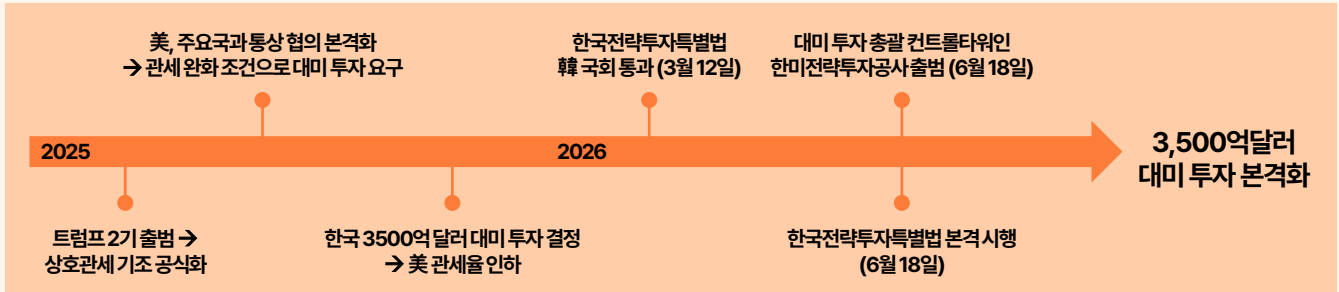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3
1. 통상 경쟁은 왜 '관세'에서 '투자'로 이동하는가	4
2. 통상 환경에서 '대미 투자'가 갖는 의미는	6
3. 한국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중심으로	9
4. 대미 투자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16
5. 시사점: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24
참고: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28

* 본 보고서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바, 추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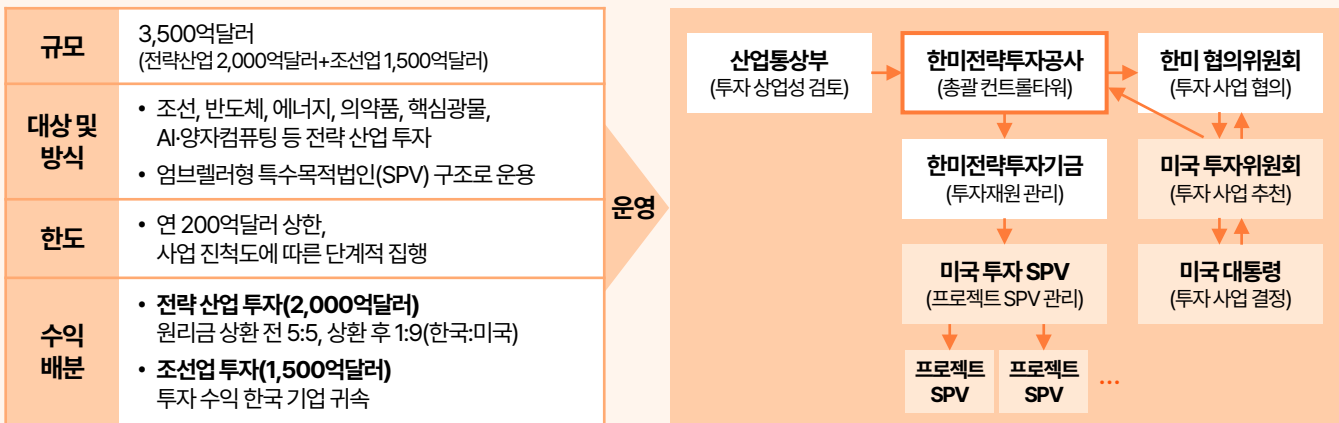
1. 한국 대미 투자 등장 배경

관세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통상 경쟁 패러다임 가운데, 한국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착수



2. 한국 대미 투자(3,500억 달러) 구조 및 운영 거버넌스

전략산업 중심 프로젝트를 엄브렐라형 SPV 구조로 설계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대미 투자를 한미전략투자공사 중심으로 집행·운영할 계획



3. 한국 대미 투자에 따른 산업 재편 방향

대미 투자가 집중되는 전략 산업을 기점으로 공급망 참여와 역할 확보가 확대되며, 산업 전반으로 기회가 확산되는 구조 재편 전망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미국 내 생산·운영 참여 확대 기반 산업 재편	미국 현지 생산-패키징-후공정 중심 공급망 재구축	인프라 기반 안정적 수익형 사업 구조 확대	미국 생산 거점 이전 및 공급망 안정성 중심 재편	미국 내 채굴-가공-정제 전 단계 참여 확대	차세대 기술 인프라 및 생태계 참여 확대

4. 기업의 준비 및 대응 방향

1 투자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 설계'에서 결정	4 경쟁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기반 실행 구조'
2 한국은 참여자가 아닌, 구조 설계자로 이동	5 투자는 확장이 아닌, 기능 재배치의 문제
3 해외 투자 확대는 산업 구조 재조정 의 시작점	

1. 통상 경쟁은 왜 ‘관세’에서 ‘투자’로 이동하는가

관세 중심 경쟁의 한계와 투자 중심 경쟁의 부상

통상 경쟁 방식이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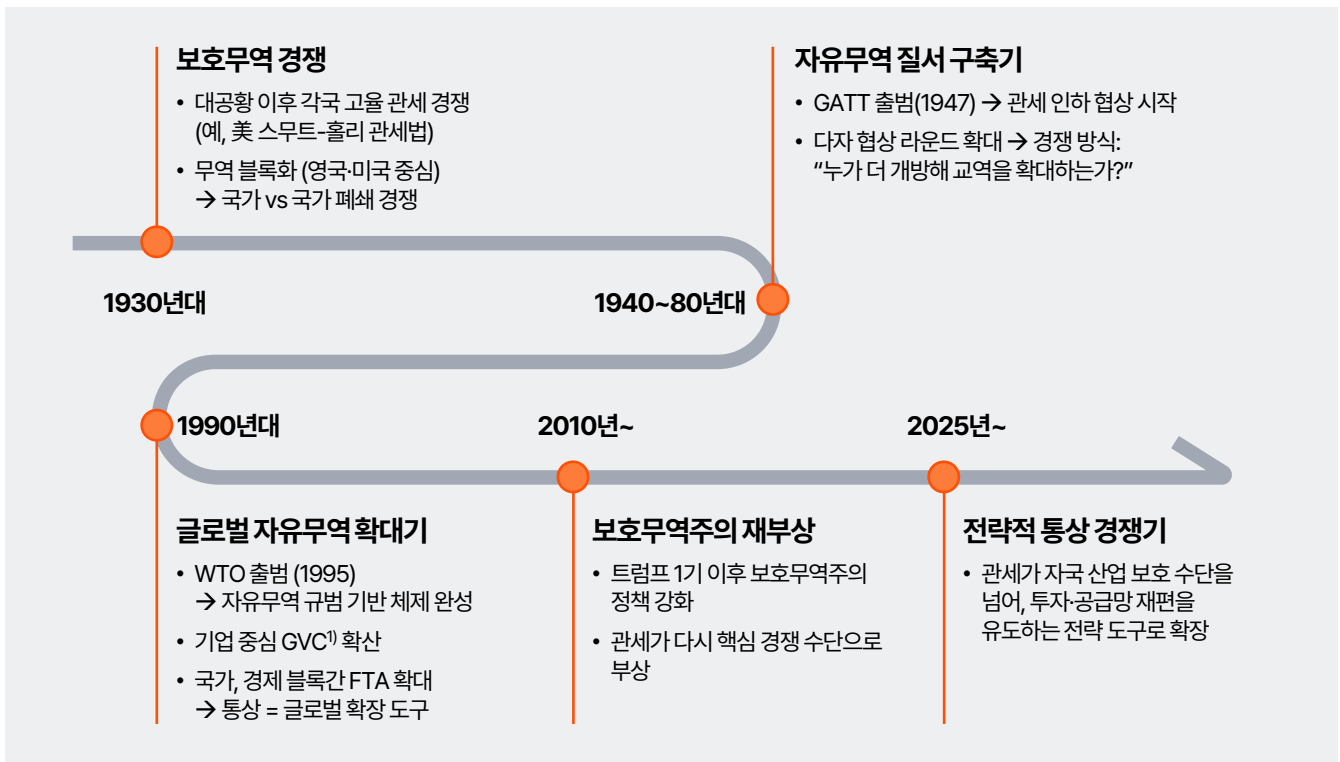
교역 확대라는 목표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관세 중심 접근에서 투자·생산·공급망 참여를 포괄하는 복합적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국제 무역은 WTO 체제하에서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기조가 지배해 왔다. 이에 따라 통상 경쟁은 관세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전환되었다. 자국 산업 보호와 교역 조건 개선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가 간 경쟁이 다시 부각되며 관세 중심의 통상 경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관세 중심 경쟁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집권 이후 관세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국 내 생산기반 확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경쟁의 초점이 생산·투자·공급망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 흐름



1)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관세는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통상 경쟁의
본질은 '투자·생산·
공급망 확보'로 이동**

이러한 변화는 관세 정책의 한계와 정책 환경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세는 수입 가격과 교역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첨단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가격보다 기술력, 인력, 생산 인프라, 정책 지원과 같은 생산 기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관세 조정만으로 산업 우위 확보는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가 핵심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단순한 교역 확대가 아니라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관세를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즉, 관세를 통해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통상 정책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한미 간 통상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정과 연계하여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5년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이하,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의 미국 내 전략 산업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를 구체화했다. 이는 통상 관계가 단순한 관세 조정을 넘어, 대규모 투자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통상 갈등은 더 이상 관세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상 경쟁의 중심은 관세율 조정을 넘어,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둘러싼 투자·생산·협력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확보하는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상 경쟁 방식의 변화: 관세 중심 경쟁에서 투자·공급망 경쟁으로

구분	관세 중심 (과거)	투자·공급망 중심 (현재)	변화
정책 목표	관세 인하·시장 개방 중심 교역 확대	생산·고용·공급망까지 포함한 교역 확대	목표는 동일, 범위는 확장
경쟁의 초점	수출 물량 확대, 가격 경쟁 중심	시장 내 생산·공급망 참여 선점 중심	'많이 파는 경쟁' → '계속 팔 수 있는 구조 경쟁'
정책 수단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관세 + 투자 유도 + 보조금 + 현지화 요건	단일 수단 → 복합 정책
시장 접근 조건	낮은 관세 기반 가격 경쟁력	현지 생산, 투자, 공급망 요건 충족	가격 경쟁 → 구조 조건 확대
경쟁력 결정 요인	가격, 관세 수준	가격 + 생산 거점 + 공급망 참여	경쟁력의 결정 변수 다변화
관세 역할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	관세 여전히 중요하나, '압박·보조 수단'	관세가 중심 → 보완적 역할로 전환
기업 전략 방향	수출 물량 확대, 가격 대응	투자, 생산 거점, 공급망 설계	수출 전략 → 구조 전략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2. 통상 환경에서 ‘대미 투자’가 갖는 의미는

미국 주도의 통상 경쟁 축 이동: 관세에서 투자·생산·공급망으로 재편

통상 경쟁의 중심을 관세에서 투자·생산·공급망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심국이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은 단순한 산업 보호조치를 넘어, 자국 내 생산 확대와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은 협정의 무역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투자 정책, 경제 안보 정책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직후 발표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해당 정책은 무역적자, 제조업 경쟁력 약화, 공급망 취약성, 국가 안보 리스크를 미국 통상 정책 재설계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통상 정책의 목표를 투자와 생산성 제고, 산업·기술 우위 강화, 무역불균형 완화, 경제·안보 강화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는 관세를 단순한 수입 가격 조정 수단을 넘어, 생산·투자·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세-투자-공급망 연계형 협상 구조의 제도화

이러한 정책 기조는 통상 협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현재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나, 재집권 초기부터 주요국과의 상호관세를 조정 협의를 미국 내 투자 및 공급망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왔다. 특히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자국 공급망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관세 인하와 연동함으로써 ‘관세-투자-산업 협력’을 패키지로 한 협상 구조를 사실상 제도화했다. 그 결과 통상 협상의 기준은 단순한 관세율 수준을 넘어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 여부와 공급망 참여 정도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합의된 주요국 합의 내용

대상국	美 첫 제시 상호 관세율 (25년 4월)	상호관세율 인하위한 대상국 합의 내용	합의 이후 美 상호관세율 ¹⁾
EU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투자 6,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3년간 총 7,500억달러 구매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무관세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약속 	15% * 예외,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무관세
일본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투자 5,500억달러 알래스카 LNG 사업에 마·일 합작 투자 자동차·쌀 등 시장 개방 	15% * 자동차 품목 관세 15%로 인하
베트남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시장 개방 미국 농산물 29억달러 구입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80억달러) 구입 	30% * 예외, 베트남 환적 상품은 40%
한국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미국산 LNG 등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 	15% * 자동차 품목 관세 15%로 인하

1) 현재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美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글로벌 10% 관세로 대체되었으나 해당 조치 또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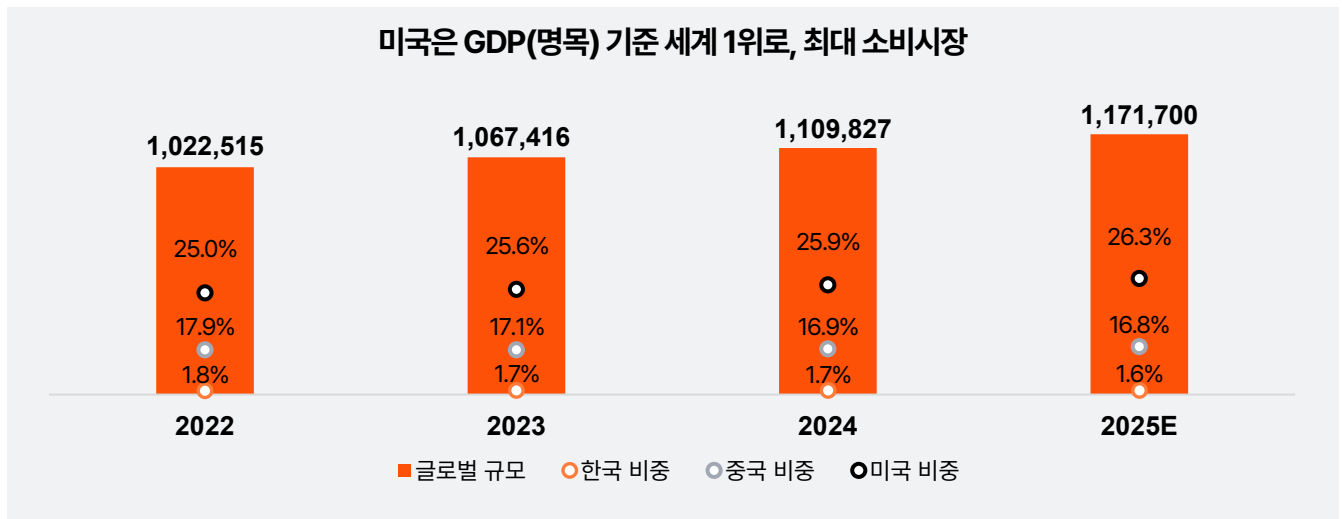
**미국의 압도적 시장·
기술 권력 기반 통상 질서
주도**

이러한 미국발 통상 경쟁 구조 변화는 미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시장 규모에 기반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글로벌 기업은 물론 각국 산업 전반이 성장을 위해 반드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접근 여부가 경제적 성과와 직결되면서, 각국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설정하는 통상 규범과 산업 정책 방향을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미국은 AI, 첨단 반도체, 클라우드 등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과 공급망 재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단순 수출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주요국과 기업은 미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대미 투자는 선택 가능한 전략을 넘어, 미국 시장 진입과 산업 참여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GDP와 주요국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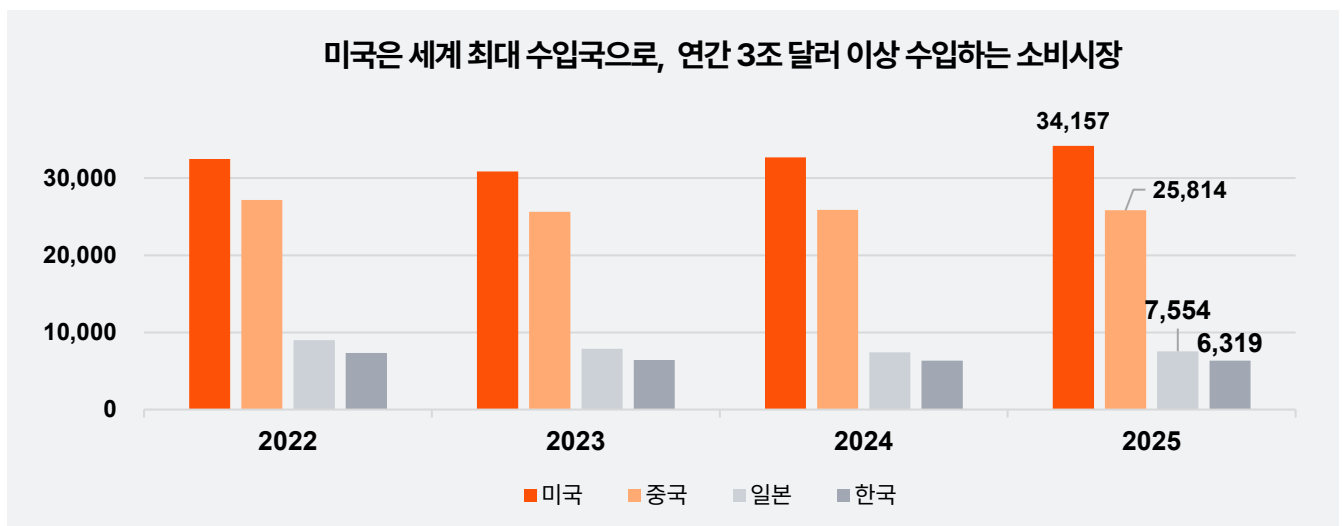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참고: 명목GDP, 2025년은 추정치
 자료: World Bank, IMF, 삼일PwC 경영연구원

주요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삼일PwC 경영연구원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수용은 미국 시장 접근과
전략 산업 기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이러한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관세 조건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특히 한국이 대미 투자로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는 규모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집행한 해외직접투자(FDI) 총액 3,646억 달러에 버금가고,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대미 FDI 2,718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과거 투자 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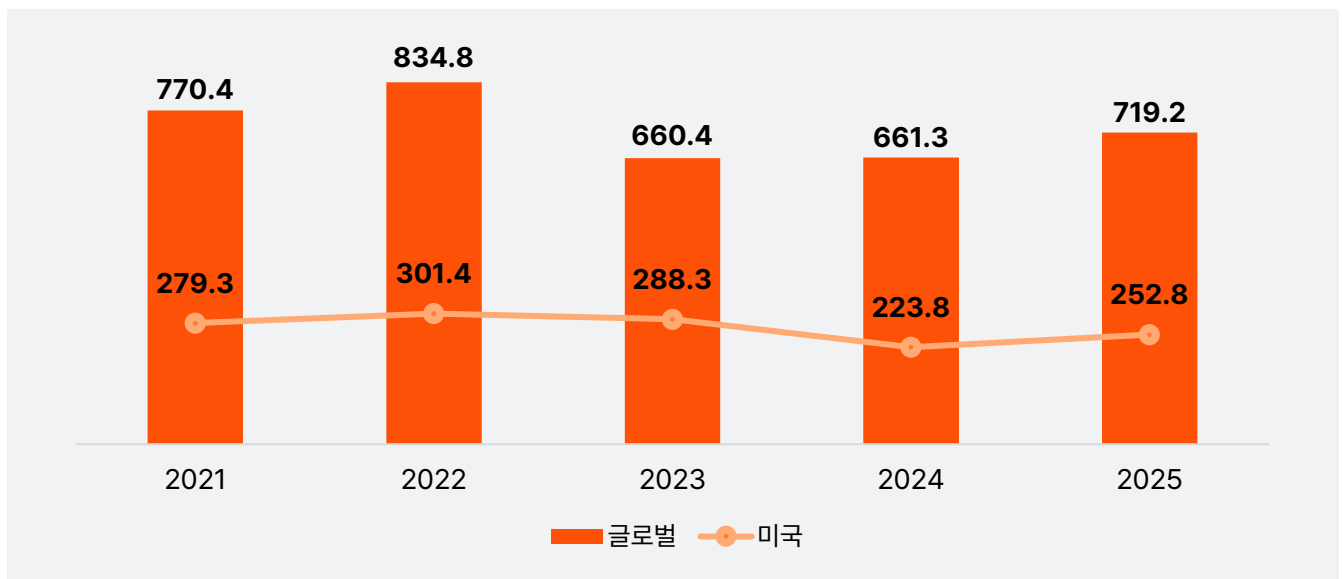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러한 투자 규모를 수용한 것은 단순한 관세 인하 대응을 넘어,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생산·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미 투자가 자금 집행 자체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생산·인프라·공급망 프로젝트 참여를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방식과 역할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대미 투자는 관세 부담을 낮추는 단기 대응을 넘어,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면서 전략 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통상 경쟁은 관세 수준 자체보다 투자, 생산, 공급망 참여를 통해 산업 생태계 내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느냐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대미 투자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성장 기회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 누적 대미 FDI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제공하는 기준 시점인 1980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함

한국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글로벌 및 미국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삼일PwC 경영연구원

3. 한국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중심으로

본 장은 한국의 대미투자
합의 배경, 구조, 운용
체계를 제시

그렇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환경이 투자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미 투자를 어떠한 조건으로 협상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을까?

해당 질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분석한다.

- 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점검하고,
- ② 대미 투자 구조와 주요 구성, 이익 배분 방식을 검토한 후,
- ③ 대미 투자 집행 및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실행 구조를 살펴본다.

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배경과 전개 과정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관세 인하의
핵심 교환 조건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상호 및 품목 관세를 통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했고, 한국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미국은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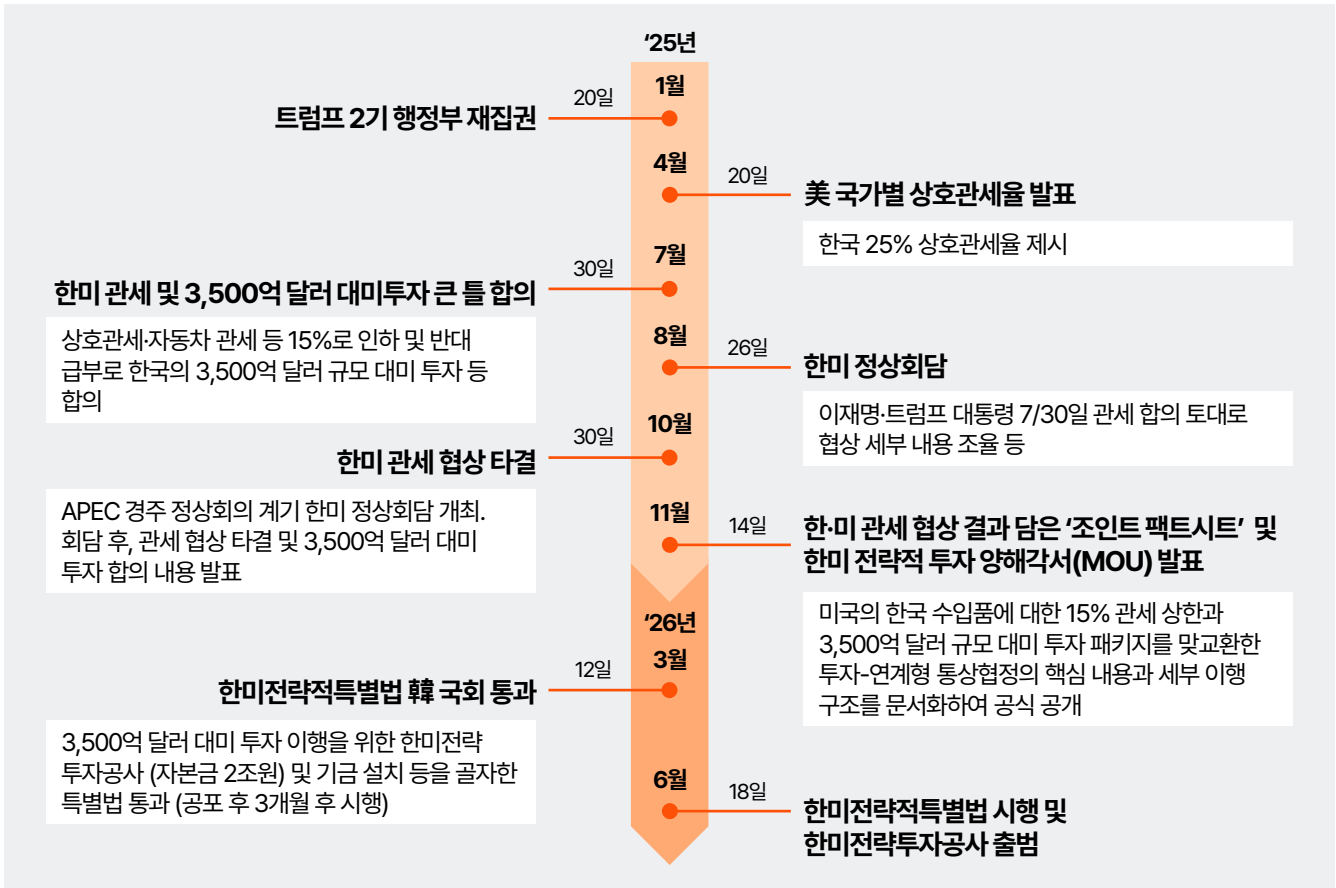
이후 한미 협상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그 결과 2025년 7월 30일 한미 간 무역합의에서는 한국에 예고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는 큰 틀이 마련됐다. 여기서 3,500억 달러는 부수적 조치가 아니라,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제시한 핵심 교환 조건이었다.

이 합의는 2025년 11월 14일, 양국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공식화되었고, 한국 내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준비가 이어졌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특별법)은 투자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 국회 사전동의 및 사전보고 등 통제 장치를 포함하여 투자 집행과 자원 운용, 위험 관리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 기점으로
대미 투자 실제 이행
단계로 전환

이 법은 2026년 3월 공포 이후 6월 18일 시행되며, 이를 기점으로 논의의 초점은 ‘합의’에서 ‘사업의 선정과 집행’으로 전환된다. 이후에는 1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발표, 사업별 자금 배분, 대미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대미 투자 이행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투자 관련 주요 타임라인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韓 한미전략적특별법 주요 내용

대미투자 정의 (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투자가 집중될 '전략적 산업 분야' 제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및 양자컴퓨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 전략적투자의 개념·분류 및 상업적 합리성¹⁾ 등 투자 기본원칙 정의 등
대미투자 원칙 (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단, 안보·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가능
대미투자 추진체계 (5~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사업 발굴하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가 투자 심의 및 의결
대미투자공사 (16~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 설립해 투자 업무 집행 및 총괄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 운영
대미투자기금 (40~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투자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정부 차입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등으로 조성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계정 별도 관리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② 대미 투자 구조와 주요 구성, 이익 배분 방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략 산업 + 조선협력' 이원 구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세부적인 투자 구조와 대상 분야, 개별 프로젝트는 2026년 6월 한미전략적특별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나, 현재까지의 투자 구조는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통해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3,500억 달러 투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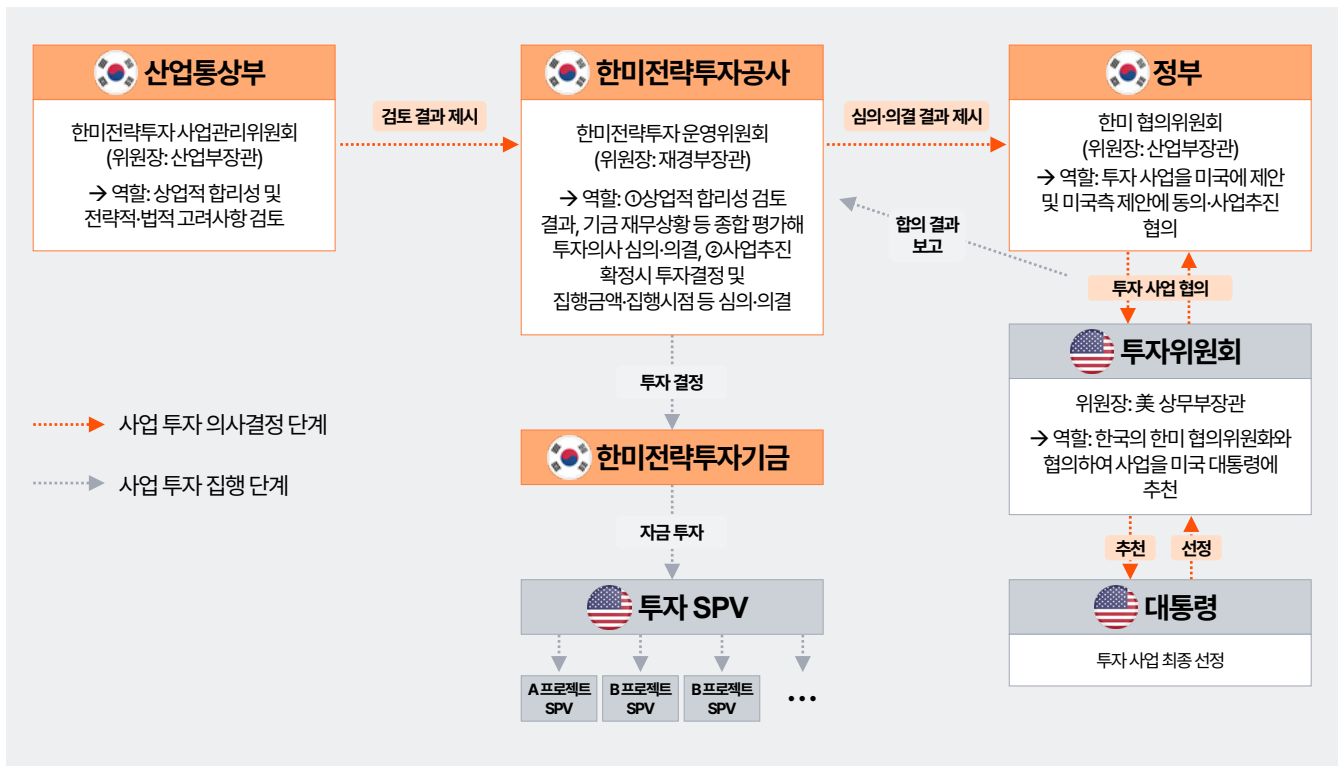
2,000억 달러는 AI 등 양국 전략 산업에 투자

먼저, 핵심인 2,000억 달러 전략 산업 투자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에 직결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자본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 대상 사업은 美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이러한 성격은 사업 선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투자 대상 사업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치되, 한국 측 협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을 선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전제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대미 투자가 외교적 합의이면서도 동시에 투자자 관점의 회수 규율이 적용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 선정 및 추진 거버넌스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삼일PwC 경영연구원

대미 투자, 선정-집행 전 과정에 시장 원칙 적용

자금 집행 방식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설계되어 있다.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른 단계별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의 주요 단계(마일스톤)가 충족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¹⁾ 방식을 적용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총액은 약속하되 집행은 통제하는 구조로, 자금 유출의 속도와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다.

SPV·리스크 풀링 기반 통합 운용 구조로 회수 안전 장치 확보

투자 구조 또한 단일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통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체 투자를 관리하는 상위 특수 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²⁾과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SPV를 분리한 엄브렐라형 구조를 적용해, 투자금을 프로젝트별로 배분·집행한다. 이후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통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묶어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 Pooling)³⁾ 구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로 보완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간주배분액 기준 단계별 배분을 통한 회수 중심 투자 구조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회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수익은 간주배분액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며, **해당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미 간 5대 5로 배분된다. 이후, 기준을 충족하면 1대 9로 전환되는 구조로**, 투자 회수 진행 수준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원리금 회수를 우선하는 투자 구조임을 보여준다.

대미 투자 이행 여부에 따라 통상 조건 조정 가능

이번 대미 투자는 투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조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인허가, 인프라, 구매계약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우선 고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대로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이자 수취 제한이나 관세 조건 조정 등의 대응 가능성도 열려 있다. 즉, 대미 투자는 투자 이행을 전제로 통상 조건이 유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는 한국 조선 산업 중심 투자 구조

한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투자는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한국 기업에 귀속되며, 전략 산업 투자와 달리 공동 투자·회수 구조를 갖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조선협력 투자는 국내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1) 투자금을 일시에 집행하지 않고, 사업의 주요 단계가 충족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의 대규모 달러 유출을 방지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시점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

2)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운영, 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투자 자산과 위험을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형태

3)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과 손실을 통합 관리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특정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성과로 보완하는 방식

4) 투자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회계상 기준금액으로, 실제 현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회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한국 대미 투자 규모·구조 및 운영 메커니즘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25년 11월) 중심으로 정리)

구분	세부 분야	주요 내용
대미 전략투자 (2,000억 달러)	투자 선정 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전제된 수익성 있는 투자에 한해 사업을 선정 • 미국 대통령이 미국 투자위원회 추천 받아 최종 선정하나, 투자위원회는 한국 정부(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투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에 직결되는 분야
	투자 일정 및 투자금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투자 사업 대상만 우선 선정 • 투자 사업 집행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른 자금 요청(Capital call) 방식
	투자금 배분 및 회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업 관리를 위한 '상위 투자 SPV'와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SPV'를 분리해 투자금을 프로젝트별로 배분·투입하고, 각 프로젝트 수익을 통합해 원리금 회수
	상환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되, 스프레드는 마일 합의¹⁾ 대비 30bp 이내로 제한
	수익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배분액 충족할 때까지는 한미 5:5, 충족 이후에는 1:9 •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
	외환 시장 안전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은 납입 시거나 규모 조정 요구 가능
	투자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젝트의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되, 상위 투자 SPV가 이를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 상환에 활용 →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의 성과로 보완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방식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국 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프로젝트의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 우선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미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 절차 가속화 등 지원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
	수익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수익은 전부 한국 기업에 귀속
	미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 절차 가속화 등 지원

1)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대미 투자 협상을 통해 기준을 형성함에 따라, 해당 마일 협상 조건을 준거로 삼고 이에 30bp를 추가한 범위 내에서 스프레드를 설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삼일PwC 경영연구원

③ 대미 투자 집행 및 관리 체계

한국 정부, 한미전략투자공사 중심 대미 투자 집행체계 구축

앞서 설명한 대미 투자 구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의된 원칙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대미 투자는 정책 목표와 재무 원칙이 결합된 구조로, 투자 대상 선정부터 자금 집행, 사후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미전략적특별법에 근거해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해 투자 집행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는 단순한 집행 기관을 넘어, 투자 판단,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수익성뿐 아니라 전략, 법적 적합성, 정책 책임을 함께 반영해 결정되며, 공사는 이러한 판단과 집행, 사후 관리와 회수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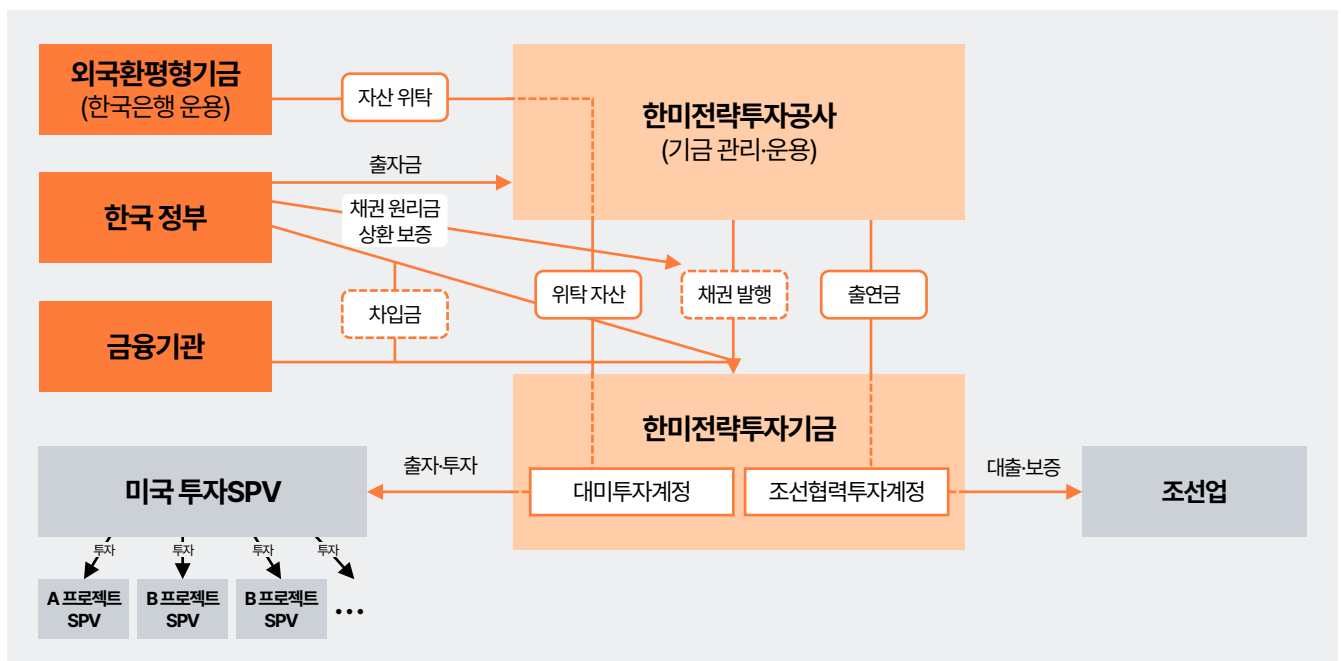
대미·조선 이중계정 기반 기금 운용 체계

자금은 공사 내 기금을 통해 관리되며, 목적에 따라 **대미투자계정(2,000억 달러)**과 **조선협력투자계정(1,500억 달러)**로 구분해 운용된다. 한국 정부는 공사에 출자금(2조 원)을 투입하고,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러한 구조는 자금 조달과 집행을 분리·관리함으로써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금 운용 구조: 대미투자 vs. 조선협력 투자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자금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미투자계정은 미국 측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형태로 집행되며, 해당 자금은 상위 투자 SPV와 개별 프로젝트 SPV를 거쳐 미국 내 개별 사업(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입된다. 반면 조선협력투자계정은 대출, 보증, 선박금융 등 금융 수단을 통해 국내 조선 및 연관 산업에 직접 공급된다. 하나는 미국 내 프로젝트 투자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금의 활용 경로가 구분되는 것이다.

대미 투자 자원 조성 및 자금 집행 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삼일PwC 경영연구원

**투자 대상 한국 사전
검토-미국 최종결정,
공사 집행 연계 구조**

투자 대상은 한미 간 역할이 구분된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최종 투자 대상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한국은 후보 사업의 수익성, 전략성, 법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사는 이러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해 투자 방식과 조건을 구체화하고, 이후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즉, 한국이 사전 검토와 협의를 맡고 미국이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는 구조 속에서, 공사는 두 단계를 연결하는 실무적 집행 주체로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투자-조선협력 간
기업 참여 방식 차별**

이러한 집행 방식은 기업의 참여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미투자의 경우 자금이 SPV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기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 주체 또는 협력 파트너로서 입찰과 제안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조선협력투자는 금융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참여는 프로젝트 경쟁보다는 금융 조건과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기금 내에서도 자금의 연결 경로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우선순위 기반 기업 참여
가능성 확대**

한편 공사 본사가 세종에 설치된다는 점은 대미 투자 집행이 금융기관 중심이 아니라 정책 집행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 심사 기준과 프로젝트 선정 역시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 참여 여부는 단순한 사업성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참여 기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4. 대미 투자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한국 대미 투자는, 자금 이전이 아닌 사업 참여형 투자 성격

통상 경쟁 방식 변화 속에서 형성된 이번 대미 투자는 기존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금융 투자와 달리, 한국 기업의 실제 사업 참여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르면, 미국은 프로젝트의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한국이 제안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급망과 운영 참여를 전제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전략 산업 중심 투자이나, 효과는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전망

이번 대미 투자는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투자 효과 역시 특정 전략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비·소재·건설·운영·서비스 등 연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성과는 산업 전반에 일률적으로 퍼지기보다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

산업 내 경쟁 기준 변화: 공급망 참여 기반으로 재편

이러한 구조 변화는 산업 내부 경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산업 내에서도 단순 생산·수출 역량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내 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산업 내부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쟁 기준은 가격과 생산 역량 중심에서 공급망 연계, 운영 참여, 현지 대응 능력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추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방향

결국 이번 대미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변화는 세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1) 대미 진출 방식이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미국 내 프로젝트 참여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
- 2) 경쟁 기준이 가격과 생산 역량 중심에서 공급망 연계, 장기 계약, 운영 참여, 현지 파트너십 확보 능력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 3) 전략 산업 내부에서도 미국 내 프로젝트에 실제로 연결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산업 내부 재편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이번 대미 투자가 기존 수출 중심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 구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수요와 중점 추진 분야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과 기회를 분석한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공급망 전반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① 에너지

에너지, AI·리쇼어링발 전력 수요 급증 속 대미 투자 1호 전망

에너지는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다. 일본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미국 내 정책적·산업적 수요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첨단 제조 리쇼어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력 소비는 약 20% 늘고, 피크 수요도 760GW에서 최대 930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서 에너지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대미 투자 초기 실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

美 전력망 노후화, 공급 확대 제약 → 통합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예상

현재 미국 전력망은 설비 노후화와 공급 제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송전선의 약 70%가 25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대형 변압기 역시 평균 사용 기간이 40년을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전력망은 신규 수요를 수용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투자는 원전·SMR 등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망, 변전설비를 포함한 통합 전력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LNG 확보 중심 대미 투자도 부상 → 조선·플랜트·기자재 동반 수요 창출 가능

한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LNG 확보도 주요 투자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LNG 수출 수출 터미널 등 관련 인프라 투자가 초기 프로젝트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 지분 참여가 아닌, 생산된 LNG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LNG 관련 투자는 운송, 액화 플랜트, 기자재 등 연관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조선·플랜트·기자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함께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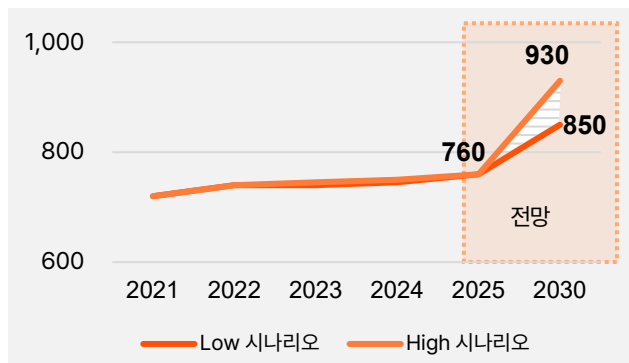
전력 인프라 및 연관 공급망 전반으로 영향 확산 가능성

이번 에너지 투자 구조는 발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력 인프라 및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기기, 송배전 설비, 케이블, 변압기, 그리드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동반 확대될 수 있으며, 조선·기계·철강 등 공급망 전반에도 영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전력기기 및 송배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공급업체로 참여할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미국 내 인허가, 지역 수용성, 공사비 상승, 장비 리드타임, 현지 조달 요건 등은 사업 속도와 참여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투자 규모 자체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프로젝트와 공급망에 얼마나 깊이 편입되는지가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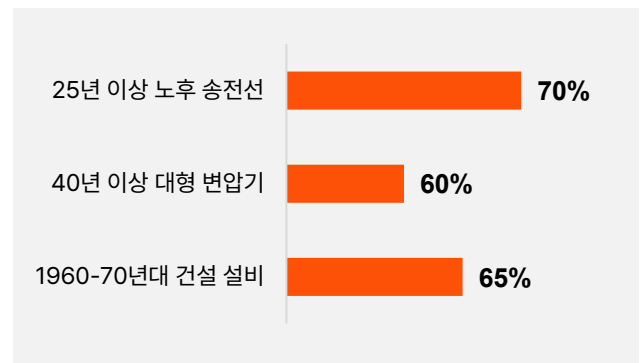
미국 전력 소비 전망

(단위: GW)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Rabobank Research

미국 전력 인프라 노후화 현황(비중)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언론 종합

② 반도체

반도체, 미국의 자국 내 생산 강화 전략 속 대미 투자 유력 산업

반도체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려 대미 투자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미국은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산 역량의 자국 내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과 같은 해외 생산·수출 중심 공급 구조로는 이러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대미투자에서 핵심 우선 순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흐름 속 첨단 패키징·HBM 중심 한국 참여 기회 확대

미국은 생산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소재, 장비, 테스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자국 내에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 기준이 단순한 생산 능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넘어, 공급 안정성, 현지 생산 기반, 기술 협력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현지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첨단 패키징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수요가 집중되는 후공정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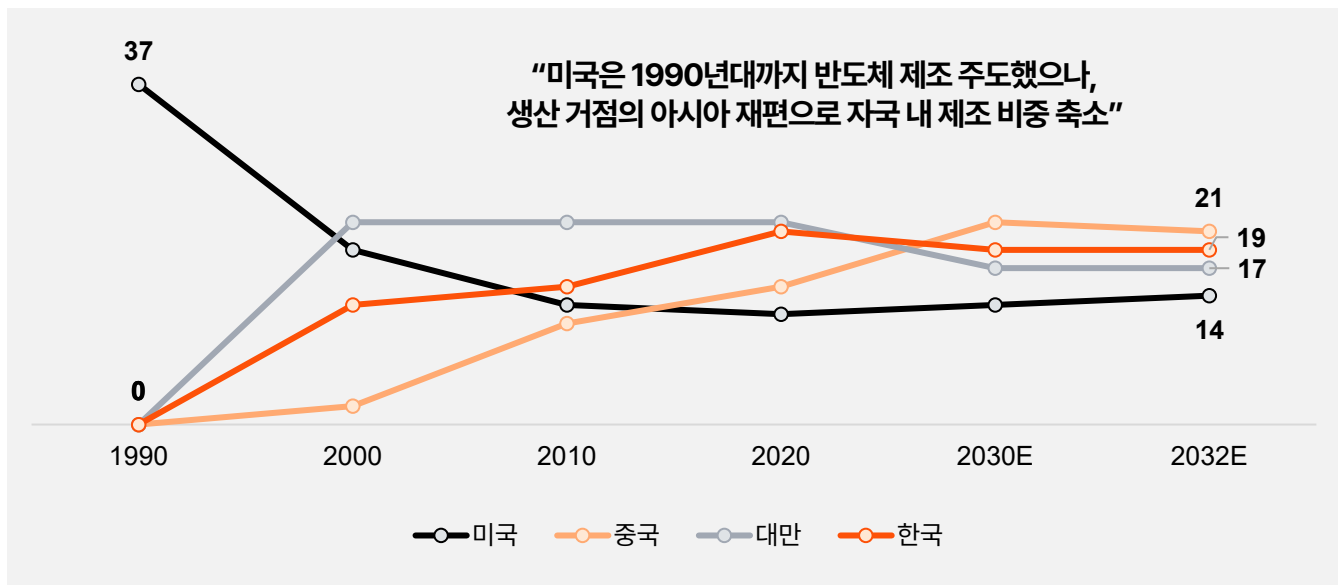
미국 내 생산·소재·장비·패키징·테스트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으로 효과 확산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의 효과는 일부 대형 반도체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재, 장비, 패키징, 테스트, 공정 인프라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요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건설 및 운영 비용, 인력 확보 문제, 보조금 및 규제 환경 변화, 현지 조달 요구 등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쟁은 단순 생산 능력보다, 미국 내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국가별 반도체 생산 비중 변화 및 전망

(단위: %)



자료: VLSI Research, SEMI, 삼일PwC 경영연구원

③ AI

AI, 데이터센터 중심 인프라 수요 급증 속 대미 투자 주요 검토 산업

AI는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대미 투자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의 초점은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인프라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은 단순 기술 산업을 넘어 인프라 중심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AI, 인프라 산업으로 확장... 데이터센터 중심 전방위 공급망 기회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산업은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중심을 넘어, 반도체, 서버, 전력, 냉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대규모 전력 공급, 고성능 연산 장비, 냉각 시스템, 통신 인프라 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AI는 단일 산업이 아닌 복합 인프라 산업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보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참여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서버 및 전산 장비,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 통신장비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기회가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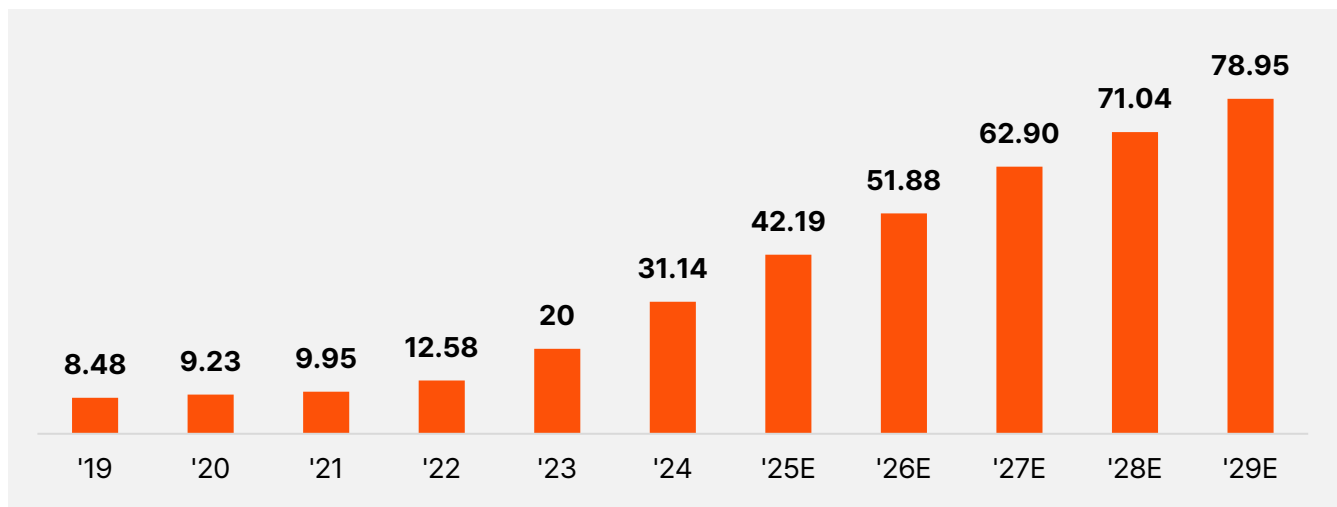
AI 대미 투자,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이 한국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전망

이러한 구조 속에서 AI 분야 대미 투자의 효과는 IT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전력설비, 산업재, 건설, 운영 서비스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전력 설비와 송배전 인프라 확충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전력 산업과의 연계도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참고: 2019년~2025년 3분기까지는 실제 투자액, 2025년 4분기 이후는 전망치이며, 2025년 연간 수치는 일부 전망치를 포함함에 따라 전망치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Statista, 삼일PwC 경영연구원

④ 양자컴퓨팅

양자컴퓨팅, 초기 산업 단계 속 미국 주도 육성... 물리적 산업 기반까지 확장

양자컴퓨팅은 아직 상용화 기반과 산업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산업이다. 미국은 차세대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이를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 연구 중심의 기술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상용화 기반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면서 투자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반도체 공정, 소재, 패키징, 측정 장비 등 양자컴퓨팅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까지 산업 역량 확보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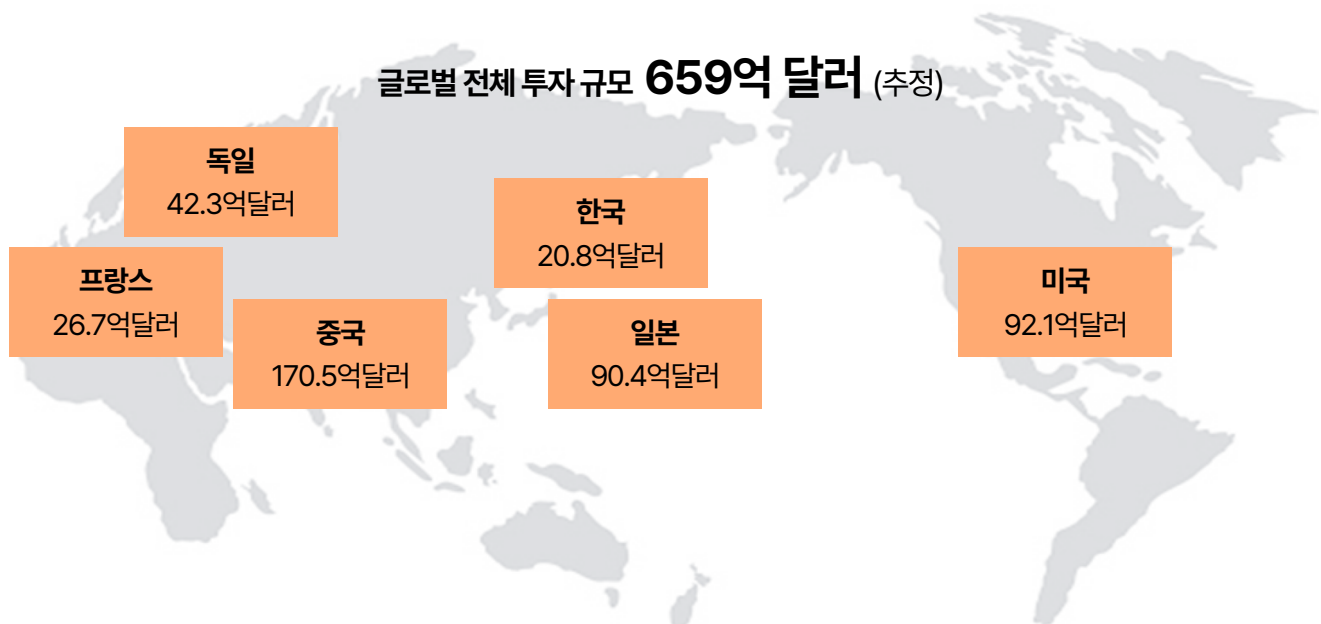
양자컴퓨팅,반도체·장비·소재 결합 구조로 확대 → 제조·운영 역량 중심 경쟁 전환

이러한 변화는 양자컴퓨팅을 단일 기술 영역이 아니라 반도체, 정밀 장비, 소재, 극저온 장비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된 구조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 기준도 이론적 성능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장비 구현과 제조·운영 역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기반 구축 능력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은 완성형보다 핵심 부품·장비 중심 공급망 진입 확대 전망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완성형 시스템 개발보다, 양자컴퓨팅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장비와 제조 기반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공정 기반 제조, 광학 계측 장비, 소재, 테스트·측정 인프라 등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으로, 산업 초기 공급망 형성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양자컴퓨팅 투자는 특정 기업이나 단일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 상용화 시기의 불확실성, 표준 경쟁, 초기 수요 제한, 높은 기술 장벽 등은 산업 확장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경쟁은 완성형 시스템 성능보다, 공급망 내 핵심 부품·장비와 제조 기반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양자기술 주도권 경쟁: 주요국 양자 기술 투자 현황



참고: 각국 정부가 발표한 양자기술 프로그램 기준으로, 2026년까지 집행된 금액과 향후 투자 약정을 포함한 총 규모임

자료: Qureca, 삼일PwC 경영연구원

⑤ 의약품

의약품, 공급 안정성 중심으로 생산 거점 경쟁 심화... 통합 생산 기반 산업으로 재편

의약품은 공급 안정성과 생산 기반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면서, 생산 거점의 위치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미국은 필수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왔다. 이는 비용 효율 중심의 글로벌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우선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약품 산업은 단순 제조를 넘어 원료의약품, 바이오 공정, 품질관리, 임상·허가 체계가 결합된 통합 생산 기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같은 고부가 분야에서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공정 기술과 품질 기준, 허가 절차 대응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특징이 강화되고 있다.

'현지 생산·CDMO· 공정·품질관리 역량' 중심 한국 기업 경쟁력

이와 같은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현지 생산, 위탁개발생산(CDMO), 공정 기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 생산설비 구축을 넘어, 미국 내 실제 허가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수행 역량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바이오 생산설비, 원료의약품, 제조 장비, 품질 시스템 등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 과정에서 참여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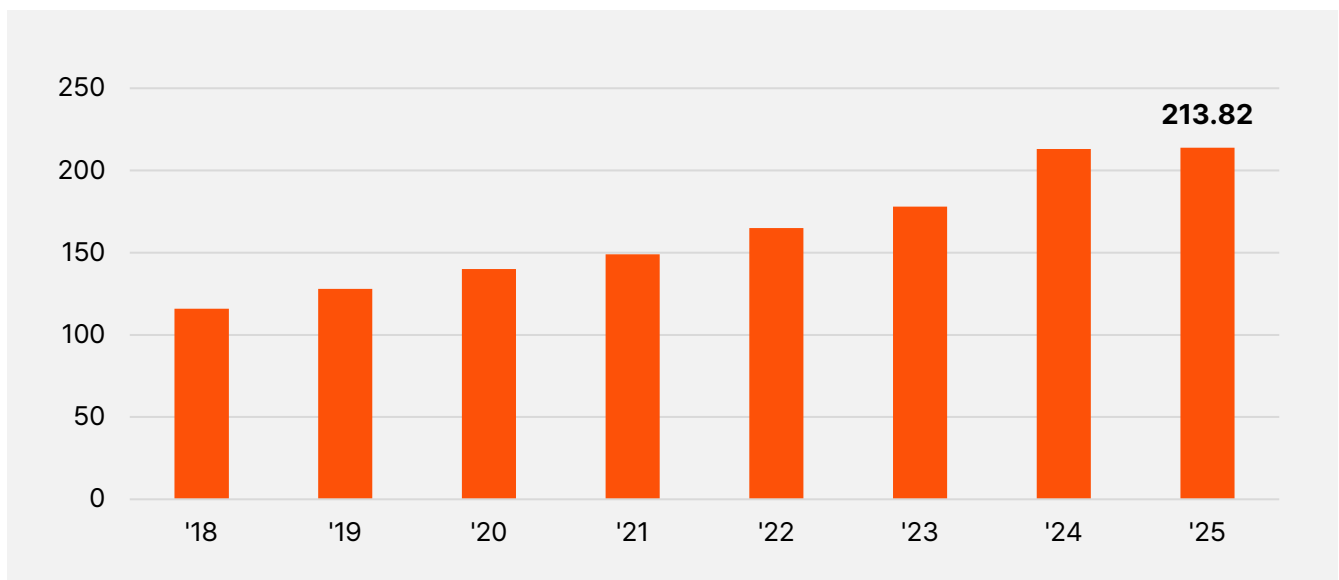
공급망 전반으로 영향 확산. 다만 규제·품질 요건은 주요 제약

이러한 투자 구조는 원료, 장비, 제조, 서비스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엄격한 허가 기준, 높은 품질 요건, 약가 통제, 규제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은 사업 진입과 확장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생산 능력보다, 규제 대응과 품질관리, 안정적 공급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약품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 Trading Economics, 삼일PwC 경영연구원

⑥ 핵심광물

핵심광물, 자원 확보 넘어 가공·정제 능력이 경쟁력... 미국, 처리 역량 내재화 추진

핵심광물은 단순 자원 확보를 넘어, 가공·정제 단계에서 산업 경쟁력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반도체,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왔다. 미국은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정제 등 가공 단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핵심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수 광물에서도 높은 수준의 수입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원광 확보보다 정제·분리·가공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능력 확보로 정책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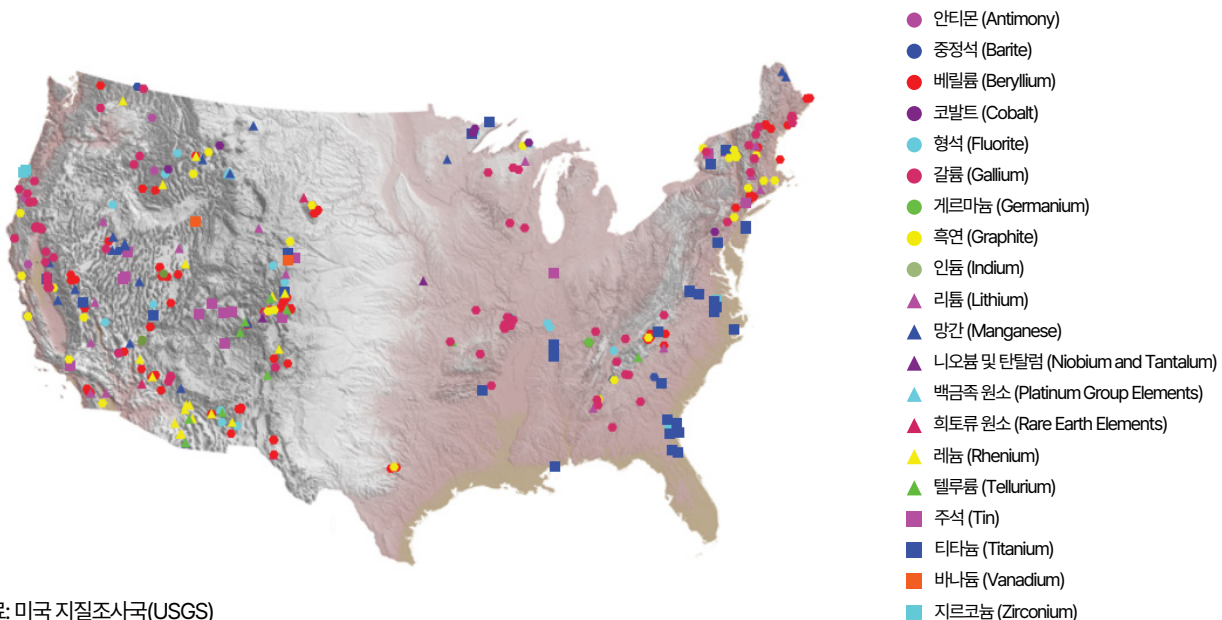
핵심광물 산업은 채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정제·가공·소재화 공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확장되고 있다. 광물 원료를 배터리 소재나 산업용 소재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기술력과 설비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급망 내 부가가치 역시 이 구간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기업 정제·가공· 소재화 공정 중심 역할 확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자원 확보 자체보다, 정제·가공·소재화 공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전구체, 양극재, 분리·정제 기술, 소재 가공 설비 등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으로, 미국 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재활용(리사이클링)과 같은 후방 단계 역시 신규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참여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화학, 소재, 장비, 재활용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원료 조달의 불확실성, 가격 변동성, 환경 규제, 장기적인 수요 변동은 사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심광물 산업에서는 단순 자원 보유 여부보다, 정제·가공·소재화 단계에서 공급망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핵심광물 자원 분포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⑦ 조선

조선, 한국 기업 중심 대미 투자 핵심 산업... 미국 재건 전략과 직접 연계

조선은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책 연계와 집행 수단이 결합된 산업이다.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구상을 제시했고, 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전략과 맞물리며 핵심 협력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무게를 두는 배경은 구조적으로 분명하다. 미국은 2025년 4월 발표된 '미국의 해양산업 역량 회복 행정명령(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을 국가 안보와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재정의했다. 이어 2026년 발표된 '미국 해양 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에서는 자국 조선업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을 진단하고,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복원, 인력 양성, 생산성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상선 건조 비중이 1%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66개 조선소 가운데 실제 건조 역량을 가진 곳은 8곳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 참여 기반 미국 조선 산업 전면 재건 전망 → 건조·MRO·설비·인력 으로 협력 범위 확장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발주 확보를 넘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 범위 역시 상선·특수선 건조뿐 아니라 조선소 설비 현대화, 유지·보수·정비(MRO), 기자재 공급망 구축, 생산성 개선, 현지 인력 양성까지 포함되는 구조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도 조선소 건조 부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선 협력이 조선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설계된 만큼, 수혜는 선박 건조를 넘어 엔진, 배관, 전장, 철강, 도장, 자동화 설비, 설계·엔지니어링, 정비 서비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선 산업이 개별 제품이 아니라 다층적인 공급망으로 구성된 산업임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내 조선 협력은 제도적 제약도 함께 갖고 있다. 존스법(Jones Act)¹⁾ 등 보호 규제와 조달 요건은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군용 함정과 일부 전략 선종의 경우 안보 규제가 결합되어 접근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제도 환경에 맞춘 협력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다.

종합해 보면, 조선 분야 대미 투자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경쟁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단순 건조 능력이나 가격 경쟁력보다, 미국 내 조선소와 생산 기반을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지, MRO와 기자재 공급망을 연계할 수 있는지, 현지화와 인력 양성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선 분야 대미 투자는 수주 중심 산업을 넘어, 미국 해양산업 재건 과정에 생산·운영·공급망 전반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1) 1920년 제정된 미국 해운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 국적 선박, 미국인 소유 운영 선박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해 외국 조선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5. 시사점: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대미 투자, '자금'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핵심은 미국 내 연결 역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 투자 확대를 넘어, 통상·산업·공급망 구조가 결합된 '투자 기반 산업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 대상 선정, 수익 구조, 집행 메커니즘이 모두 정부 간 합의와 정책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은 더 이상 기업 단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기업 실행이 결합된 '복합 경쟁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쟁의 초점 또한 '어떤 산업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서 '어떤 구조로 참여해, 공급망 내에서 어떤 역할을 확보할 것인가'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이번 대미 투자는 산업별 기회가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투자 구조와 공급망 내 역할이 결합된 '선별적 기회 배분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응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전략적 투자 유치·배분 체계 재설계

투자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 설계'에서 결정된다.

2

공급망 및 산업 포지셔닝 재정립

한국은 참여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로 이동해야 한다

3

국내 산업·고용 영향 완충 체계 구축

해외 투자 확대는 '산업 구조 재조정'의 시작점이다

4

민관 공동 투자·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경쟁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실행 구조'다

5

기업의 글로벌 투자 전략 재편

투자는 '확장'이 아니라 '기능 재배치'의 문제다

투자는 유입 규모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가 중요

① 전략적 투자 유치·배분 체계 재설계

“투자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 설계’에서 결정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이미 합의된 외생적 조건이며, 향후 정책의 핵심은 투자 규모 확대가 아니라 이를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있다. 특히 이번 투자 구조는 산업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집행된다는 점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어떤 프로젝트에 연결되느냐’가 기업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반도체 기업이라도 단순 생산 참여와 첨단 패키징 프로젝트 참여는 공급망 내 위상과 수익 구조에서 차이를 만든다.

- **정부:** 투자 기준을 산업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하고, 전력망 인프라, 첨단 패키징, LNG 인프라 등 핵심 병목 영역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방식도 단순 지분 참여와 다른 설계 참여, 운영권 확보, 장기 계약 선점을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 **기업:** 단순 참여를 넘어,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납품을 넘어 설계, 운영, 장기 계약 기반 역할로 확장하고, 프로젝트 내 구조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는 ‘수익 확보’에서 ‘공급망 내 전략적 지위 확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투자 방식과 산업 내 역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략 과제로 수렴된다.

② 공급망 및 산업 포지셔닝 재정립

“한국은 참여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로 이동해야 한다”

대미 투자 환경에서는 공급망 내 위치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시에 공급망은 단순한 생산 분업 구조를 넘어, 설계-조달-운영-유지 보수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가치 창출의 중심 역시 생산에서 운영과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 생산 기능은 대체 가능하지만, 시스템 설계, 운영 기준, 핵심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은 구조적으로 대체가 어렵다. 실제로 데이터센터는 서버보다 전력·냉각·운영 시스템이, 반도체는 전공정보다 패키징·테스트가, 에너지는 발전보다 송전·운영 구조가 핵심 가치 창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부:** 산업 전략의 기준을 생산 중심에서 가치 창출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전환하고, 전략 산업 내에서도 공급망 병목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투자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단순 생산이 아닌 설계·운영 중심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기업:** 단순 제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공급망 내에서 설계·운영 핵심 모듈 등 구조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망에서 특정 기능이 빠질 경우 시스템 전체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핵심 노드’를 선점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이는 공급자로서의 참여를 넘어, 공급망 내 가치가 형성되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위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의 역할을
'제조기지'에서
'전략 파트너'로 전환

③ 국내 산업·고용 영향 완충 체계 구축

“해외 투자 확대는 ‘산업 구조 재조정’의 시작점이다”

해외 투자 확대의 성과가 국내 경제로 환류

대규모 대외 투자는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국내 산업 기능의 재배치를 유발하는 구조적 재편 요인이다. 특히 생산거점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부품·소재 생태계 약화, 중소기업 축소, 지역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 생산이 해외로 이동할 경우, 연관 장비·소재 산업도 동반 이동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정부:** 대외 투자와 국내 산업을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심 공정과 R&D의 국내 유지를 전제로 하고, 국내 공급망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 충격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 **기업:** 글로벌 사업 구조를 ‘생산은 해외, 기술과 고부가가치는 국내’로 분리하는 Dual Value Chain 전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가 아니라, 기능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결국 이는 해외 투자 확대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④ 민관 공동 투자·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경쟁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실행 구조’다”

산업 경쟁은 ‘국가+기업’ 단위로 전환

이번 대미 투자는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을 넘어, 프로젝트 단위에서 요구되는 복합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된다. 대형 프로젝트는 금융 구조 설계, 인허가 대응, 건설 및 장비 공급, 운영 역량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하며, 단일 기업이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LNG 프로젝트는 조선·EPC·금융·운영·장기 계약이 결합되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통신·반도체·냉각·건설이 통합된 형태로 추진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통합 수행 체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 **정부:**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 지원자 역할을 넘어, 컨소시엄 구성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외교 역량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발굴부터 참여,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민관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기업:** 경쟁을 개별 입찰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 설계 경쟁으로 인식하고, 기술·금융·운영 역량을 결합한 컨소시엄 기반 참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전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는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기업이 결합된 실행 구조 간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의미한다.

㉔ 기업의 글로벌 투자 전략 재편

“투자는 ‘확장’이 아니라 ‘기능 재배치’의 문제다”

투자 성과는 기능 배치와 역할 고정이 좌우

대미 투자는 기업 전략의 중심을 단순한 해외 진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내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전환시킬 것이다. 투자 판단 기준 역시 비용과 규모를 넘어, 정책 리스크, 공급망 접근성, 전략적 위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 전략은 1) 생산: 시장 접근이 필요한 국가, 2) 기술: 축적과 보호가 필요한 국가, 3) 공급망: 비용과 안정성이 중요한 지역으로 분화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 구조는 생산, 기술, 공급망 기능이 분화된 다층적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시장접근 및 정책 혜택 확보 측면에서, 한국은 기술개발 및 핵심 공정 유지 차원에서, 동남아는 조달 및 중간재 생산을 위한 접근과 같은 다층적 사업 구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 대미 투자 확대가 특정 국가 집중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국내와 제3국을 포함한 기능별 분산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핵심 공정의 국내 유지를 전제로, 글로벌 생산·투자 구조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기업:** 투자 전략을 ‘확장’이 아닌 ‘기능 배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산, 기술, 공급망 기능을 구분해 최적 위치에 배치하고, 글로벌 사업 구조를 역할 중심으로 재편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성과는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공급망 내에서 어떤 역할을 구조적으로 고정시켰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종합하면, 대미 투자 대응의 핵심은 정부의 ‘구조 설계’와 기업의 ‘역할 확보’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나 산업 분류보다, 투자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확보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대미 투자는 전략 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업성, 공급망 참여, 운영 기능이 결합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회 역시 산업 전반에 일률적으로 배분되기보다 프로젝트별로 차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순한 시장 진출이나 단기 수주 확보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하고, 공급망 병목 영역과 민관 협력 기반을 중심으로 실행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프로젝트 내 수행 가능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미 투자 대응은 미국 내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산업·고용과의 기능적 연계 구조를 병행 설계해야 하며, 기업 역시 생산은 해외, 기술과 고부가가치는 국내에 두는 방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의 단위 역시 개별 기업을 넘어, 금융·정책·외교·산업 역량이 결합된 국가 기반 실행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결국 이번 대미 투자는 일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국이 재편하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정부는 어떤 구조를 설계하느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대응의 핵심은 정부의 제도 설계와 기업의 실행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미 투자를 공급망 내 전략적 지위 확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데 있다.

참고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1/2)

일본의 대미 투자는 2026년 2월, 1차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3월, 2차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도 가스발전, SMR, 에너지 인프라 등 전력·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미 투자 초기 프로젝트가 미국의 정책 수요가 가장 큰 분야부터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투자도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사례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투자 수익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준다. 전력 인프라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시장 기회는 크지만,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 측에 귀속되는 구조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미 투자에서 정책 목적과 사업성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투자 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은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투자 구조를 두는 방식으로, 사업 단위는 명확하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 변동이 그대로 투자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다. 한편 한국은 개별 프로젝트를 상위 구조로 묶는 방식(엄브렐러형 SPV)을 적용하고 있어, 프로젝트 간 손익을 일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형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 대미투자 프로젝트 (1, 2차)

1차 프로젝트: 360억 달러
('26년 2월 발표)

오하이오주 가스발전소

- 발전용량 9.2기가와트 →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
- 주도 기업: SB에너지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 → 연간 200~300억 달러 원유 및 정유 수출 역량 확보 전망
- 주도기업: 센티널 미드스트림

조지아주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 핵심광물 시설로,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 주도기업: 엘리먼트 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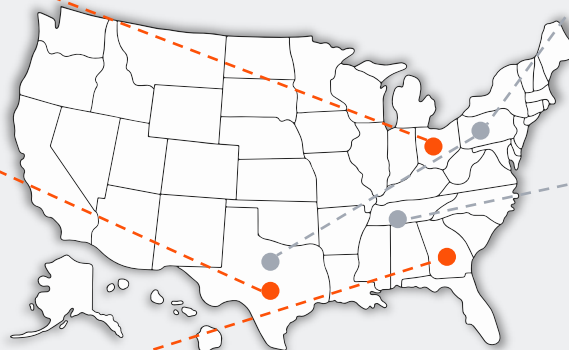
2차 프로젝트: 730억 달러
('26년 3월 발표)

펜실베이니아주·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소

- AI데이터 인근 발전 시설 건설되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전력 사용 예정

테네시주·앨라배마주 SMR

- 사업 규모 400억 달러
- 주도기업: GE버노바, 히타치 건설기계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26년 6월 기준)

참고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2/2)

이러한 일본 사례는 한국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미 투자 초기에는 에너지·전력 등 정책 수요가 큰 분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먼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수익성 검토를 별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규모 투자일수록 개별 사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은 투자 한도 설정, 상업적 합리성 기준, 단계적 자금 집행, 엠브렐러형 SPV, 수익 배분 조정 조건 등을 통해 자금 집행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강한 안전장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미 투자 구조 및 현황 비교: 한국 vs 일본

	한국	일본
투자 규모	3,500억달러 (전략산업 2,000억달러 + 조선 1,500억달러)	5,500억달러
투자 방식	직접투자+대출 및 보증	직접투자 + 대출 및 보증
투자 한도	연 200억달러 상한, 사업 진척도에 따른 단계적 집행	상한 없음, 수시 집행
수익 배분	원리금 상환 전 5:5, 상환 후 1:9 (한국:미국) * 20년 내 상환 어려울 시 비율 조정	원리금 상환 전 5:5, 상환 후 1:9 (일본:미국)
SPV 구조	엠브렐러형 SPV (상위 SPV - 개별 프로젝트 SPV)	개별 프로젝트 SPV
구조적 특징	안정성·통제 중심	규모·속도 중심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Business Contacts

삼일PwC Global Trade Platform

플랫폼 리더/통상

소주현 Partner

so.juhyun@pwc.com

강명수 센터장

myung-soo.kang@pwc.com

해외진출자문

정민우 Partner

min-woo.jung@pwc.com

무역구제(반덤핑)

한종엽 Partner

jongyup.han@pwc.com

무역구제(반덤핑)

김중현 Partner

joong-hyun.kim@pwc.com

무역구제(반덤핑)

이승욱 Partner

seung-wook.lee@pwc.com

해외세제

박광진 Partner

kwang-jin.park@pwc.com

이전가격

박준환 Partner

jun-hwan.park@pwc.com

해외M&A

허제헌 Partner

je-heon.heo@pwc.com

공급망시스템

최준걸 Partner

jun-kirl.choi@pwc.com

수출통제

김현준 Director

hyun-jun_1.kim@pwc.com

삼일PwC Energy Transition Platform

한정탁 Partner

jungtak.han@pwc.com

최성흠 Partner

seong-heum.choi@pwc.com

이정규 Partner

jake.lee@pwc.com

유옥동 Partner

ok-dong.yu@pwc.com

조운희 Partner

woonhee.cho@pwc.com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박경상 Partner

kyoungsang.park@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PwC Korea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PwC Korea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PwC Korea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PwC Korea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6W-RP-084

© 2026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